

'MB·朴 사면' 정국, 與도 野도 실리 못 챙기고 내상만 입었다

이낙연 리더십 상처·민주당내 친문세력 강력반발 국민의힘, '사과' 조건부 사면론 반발 '마이너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정국을 뒤흔드는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실리를 챙기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국정조사 불발에 이어 사면까지 당 내 제동에 걸리면서 리더십이 훼손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친문 주류세력의 견제함이 재확인된 점도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탄핵·구속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당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여론의 '조건부 사면'에 반발하면서 계파 분색을 드러내 역으로 과거 정권과 단절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우면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

장은 의외로 제한적이었다. 야권에 선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내부 분위기로까지 치달지 않았고, 자중지란은 오히려 여권 안에서 일어났다.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사면론에 강력 반발하자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사면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을 일시 봉합했다. 대선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사면 카드가 이 같이 역효과를 낸 배경은 이낙연 대표의 조급증과 친문 주류 세력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당내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등 사전 정치작업 없이 갑자기 사면론을 띄우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민통합을 명분 삼아 돌파구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고 당 내에서 역풍을 맞았다.

친문(親文) 3선 정청래 의원은 이명

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5대 불가'를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 '심복'으로 불렸던 윤건영 의원은 집권당 대표의 결단을 "여당 대표의 소신"으로 깎아내렸다. 민주당 초선 중에서도 "춧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김용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김남국)" 등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이라는 분이 나서, 명색이 당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을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일축했다"면서 "강성 친문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몽성 있는 당 대표마저도 일개 개인으로 치부해버리는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선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집권여당이 언제든 지킬 수 있는 카드라, 차라리 대선 정국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승부수로 활용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오히려 유권자가 한정된 재·보궐선거보다는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 사면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게 과급력이 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영수회담도 국정원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등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민감한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된 국면에서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체면을 세울 만한 결과물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당대표의 사면론을 뒤집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중도, 무당층 등 외연 확장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당 밖에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초반에 냈어도 오히려 분열은 여권보다 야권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강행해 보수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불만 기류가 남은 상황이었던 만큼 탄핵·구속 정당성이나 대국민 사과의 당위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재연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실사 사면이 단행되더라도 정치적 집은 야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한 옥중편지를 공개했듯, 두 전직 대통령이 만일 석방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보나 메시지를 낼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을 경우 과거 정권과 단절하고 탄핵의 강을 넘으려던 기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고 두 대통령과 거리두기에만 골몰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아 보수표가 분산되거나 집도끼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 정국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야권 분열 등 다목적 포석으로 사면을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관망하기 보다는 당 지도부 차원의 원칙론에 입각한 원 보이스를 유지하며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부 사면론에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를 그렇게 속좁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폄하했고,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 친이계 출신 3선 장제원 의원은 "이낙연 집권당 대표의 기껏치려 가벼운 말과 행동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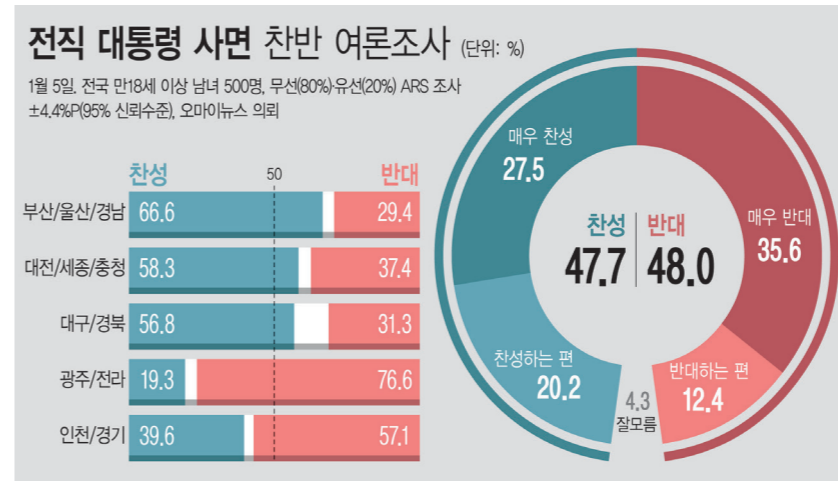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됐다"는 지적을 내세우며 "카드로 보이는" "정치 쇼", "극약무도 짓"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한 여론의 조건부 사면에 친이·친박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해 사면 논란을 키울수록 오히려 '친이·친박 정치색'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보수야권 분열에 대한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결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박근혜 사면 여론 '찬성' 47.7% vs '반대' 48.0%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은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 응답은 48.0%(매우 반대

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반대'가 56.9%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49.0% vs 47.6%)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 별로도 응답이 차이를 드러냈다. 자신을 보수라고 대답한 이들 중 67.5%가 사면에 찬성했고, 반대는 32.1%였다.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찬성은 21.2%에 그쳤고, 반대가 75.1%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51.0%, 반대 43.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742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포인트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